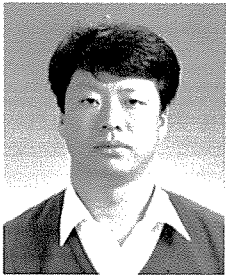


“출연연구기관 경쟁력 강화 급하다”



고 영 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한국화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정부출연기관 통폐합·민영화
추진을 둘러싸고 과학기술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백지화 발표에도
우수 인력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WTO체제 출범으로
어느 때보다도 기술자립이
시급한 이때 출연기관의
올바른 역할수행을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통폐합·민영화 추진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아온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은 백지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수 인력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자체 선거가 끝나면 통폐합·민영화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예년보다 3배 이상의 연구인력이 이직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10명중 8명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입만 열면 과학기술진흥을 외치지만 정작 연구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연구의욕을 상실해가고 있는 양상이 반복·심화되고 있다. WTO체제 출범과 함께 세계는 바야흐로 경제·기술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자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써 70년대 이후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해 온 출연기관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경쟁력 강화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국가 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을 유도하는 소중한 단초가 될 것으로 믿는다.

27곳에 4천억원 지원

출연기관은 정부가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주되 국립연구기관과는 달리 비영리의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며 95년 4월말 현재 과학기술처 산하 22개(9개 부설기관 포함)와 통상산

업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정보통신부, 재정경제원 산하에 각 1개씩 27개 출연기관이 있다. 이중 2개는 교육기관이며 4개는 지원기관이다.

출연기관의 예산은 크게 정부지원 예산과 민간수탁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과학기술계획과는 거의 무관하게 국가의 하부 연구개발조직을 유지·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과기처의 총괄 예산에 속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기본적인 경상비(인건비, 기관 운영비 등)와 과학기술계획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특정연구개발 과제비, 공업기반기술 과제비, 대체사업비 등의 직접적 지원 및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간접적 지원이 있다. 95년 현재 27개 출연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지원은 약 4천억원 정도이며 전체 인원은 약 1만2천여명(박사 3천5백여명)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첫째로 정부의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하고 출연기관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94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과 일본의 약 10분의 1 정도 수준이며 전체 과학기술투자는 총액기준으로 미국의 3%, 일본의 5%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IBM이나 GM사 등의 1개 기업 투자액에도 못미치고 있다. 그나마 이중 정부투자분은 약 17% 정도으로써 외국평균 약 50%에 비하면 너무 적은 규모일 뿐 아니라 전체 규모는 미국의 1개 국책연구소(미국은 연방산하에만 7백60개의

국책연구소가 있음)나 중견 기업연구소 규모에 불과하다. 한편 새로운 제품개발과 기술자립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가 국가적 과제이나 그것은 산업기술과 함께 기초기술 및 핵심원천기술 등의 균형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보건의료, 환경, 교통, 에너지, 우주, 해양 등 공공복지기술과 미래기술도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분야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립도 지원해야 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부담이 크나 국가적으로는 필요한 기술 등도 있다. 이것은 결국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작금의 국제환경에서 민간과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출연기관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 출연기관은 정부정책이 너무 일관성없이 자주 바뀜으로써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 이러한 원인은 결국 정부의 정책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권한은 과학기술처가 가지고 있으나 예산은 재경원에서 틀어잡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예산은 총괄예산이 아니라 부처별 예산 체제이며 이를 조정할 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제 기능을 상실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름만 있다. 예산 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통령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수석비서관을 두어 과학기술에 관한 권한을

통일시켜야 하며 종합과학기술심의회와 자문회의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출연기관에 대한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출연기관은 너무 잦은 통폐합과 비현실적인 예산 지원, 단기과제 위주의 부족한 연구비, 과도한 통제와 간섭 등으로 안정성과 자율성을 상실해 왔다. 국민이나 국가가 동의하기 전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폐합·민영화할 수 없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본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부간섭을 최소화하고 연구방향, 과제선정에 있어 기관 자체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업수탁 연구비 및 기관 자체수입의 자율집행을 보장하는 등 자율성도 부여해야 한다.

넷째, 공정한 평가제도를 확립하고 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출연기관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현행 노사관계 및 행정 관리위주의 기관평가를 지양하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기관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자율과 권한을 부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합리적인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사회 제도 및 기관장 선출제도를 개선하고 서구와 같이 노동조합의 인사·경영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연구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이 매우 시급하다. 출연기관의 주요 이직요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간섭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

은 급여와 불합리한 인사제도 등을 들고 있다. 80년대 중반이후 임금인상률은 매년 3~5%에 그쳐 왔으며 이로 인해 94년 현재 민간기업의 65~70%, 사립대학의 70~75%, 투자기관의 70%, 언론사의 60%에 머무르고 있으며 심지어 박봉에 시달린다는 공무원의 90%수준이다. 그리고 각종 복지혜택도 미약한 채 승진, 승급의 적체 등으로 인사상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급격한 임시직의 증가와 인원감축, 계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해 고용불안마저 가중되고 있다. 처우 및 인사제도의 개선과 신분안정, 객관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정부의 통제서 벗어나야

80년대 이후 과도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출연기관의 연구환경을 왜곡시켜왔다. 과학기술 자체가 왜곡 발전(군사무기, 환경파괴)하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과학기술이 이윤추구와 억압의 수단으로 자리잡아서는 곤란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에의 기술종속과 대외 예측성에 대한 탈피와 이를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지금 정부, 정치권, 언론 등은 출연연구소가 투자에 비해 성과가 없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많은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기도 하다.

이래서는 올바른 문제의식이 호도될 수 밖에 없다. 출연연구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바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진정한 문제의식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⑤